

3명 중 2명 “광주 전세가격 인상률, 5%가 적정”

사랑방부동산, 공인중개사 250명 설문

전세 매물수 · 가격 전망은 의견 엇갈려

광주 공인중개사 3명중 2명은 광주 전세가격 인상률은 5%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 지역 부동산 전문포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12일 광주 공인중개사 250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한제, 광주 지역 인상률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임대인은 전세

계약 갱신 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인상률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광주시 역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사랑방의 설문조사 결과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 10명중 6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64%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4%, ‘모르겠다’는 1.6%였다.

광주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인상률의 경우, 최대치인 5%가 적당하다’는 공인중개사가 6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공인중개사가 15.6%로 2위를 차지했다.

전월세 상한제 이후 광주 전세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세 매물량 변화는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날 것’ (45.2%)이라는 예측과 ‘큰 차이가 없을 것’ (34%)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세 매물이 줄고, 매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2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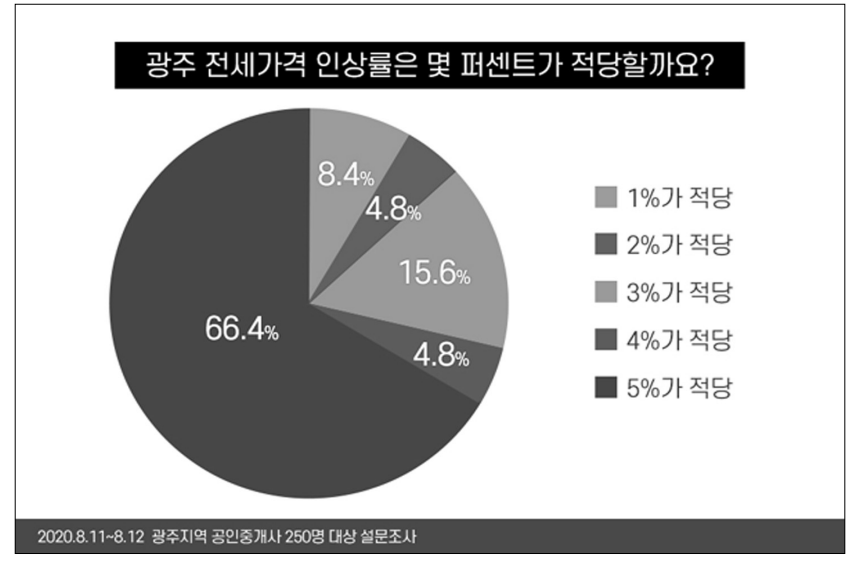
전월세 상한제 이후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모두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큰 차이

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51.6%로 약간 많았지만,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48.4%에 달했다.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0%포인트다.

사랑방 콜마케팅센터 운영팀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전세 감소·월세 증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더불어 광주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 품귀현상이나 임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때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광주 지역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1억8123만 원으로 2년 전인 2018년 평균 전세가



격과 비교하면 5.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지구별로는 동구가 2년 전 대비 15%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

했고 남구 9.2%, 서구 6.6%, 북구 6.5%, 광산구 1.0% 각각 상승했다.

김민정 기자

‘벼랑끝 기업’ 직원들 해고 위기에 ‘불안’

기업 결정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 없어 ‘발동동’

“코로나19 이후 4월부터 무급휴직 상태인데, 회사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구조조정 얘기 하는게 아닌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시기는 또다시 늦어지고 있다. 그나마 맷집이 있는 대기업들은 재택근무, 유연근무 근무체계 및 방역체계를 강화하며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공장 가동 중단과 소비절벽 등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영세기업들의 대부분은 고용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상반기 코로나19 사태에도 기업들이 해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정부 고용유지지원금마저 순차적으로 끊기면 휴직 수당 지급이 어려워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사업장은 7만7453곳으로 지난해(1514건)의 51배에 달한다.

정부가 여행업·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해 급한 불은 껐지만 그 외 업종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끊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중소기업)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에 따르면, 고용유지금 지급연장이 중단될 경우 어떠한 선택을 할 것

인지 물었다.

첫 번째로는 ‘회사 지침에 따른 것’ (43.9%)이라고 답했고, 두 번째로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30.7%)는 대안이 돌아왔다. 이어서 ‘퇴사·해고’ (9.9%), ‘퇴사·자발적’ (9.0%), ‘육아휴직’ (6.1%) 순으로 집계됐다.

해당자의 대부분은 막막한 입장 이었고, 18.9%는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기도 힘든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자구책이 한계에 놓이면 더는 고충분담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급기간 최대 60일 연장에 당장 발동의 불은 끄게 되었지만, 한시적 연장인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장인들의 막막함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코로나 여파’ 조기귀국 늘었다...해외이삿짐 62% 증가

올 상반기 세관 통관한 이삿물품 1만432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pandemic) 하면서 국내로 반입되는 이삿물품 통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1~6월까지 세관에서 통관한 이삿물품은 1만432건으로 이중 8216건이 특송으로 통관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013건과 비교해 62%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해외에서 거주하는 유학생과 주재원이 비교적 안전한 국내로 조기 귀국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삿물품 통관은 최근 3년 간 10% 이내의 완만한 수준에서 증가했는데 올 상반기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62% 급증했다는게 세관의 설명이다.

관세청이 집계한 전국 이삿물품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만7207건 ▲2017년 3만2845건 ▲2018년 3만3047건 ▲2019년 3만551건 ▲2020년 1~6월까지 1만842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코로나 19로 조기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삿물품에 대해 통관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이사자의 조기 귀국시에는 해외 거주기간 요건(해외 1년 이상 거주, 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이삿물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항공편 운항 중단, 이동제한 명령, 발령 취소 등으로 이사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삿물품이 반입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삿물품으로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오유나 기자

“다주택 매물 비싼 값에 30대가 영끌로 받아 안타까워”

김현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최근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많이 거래 됐는데 그 물건들 30대 젊은층이 영끌(영혼까지 돈을 모아 집을 마련했다는 뜻)로 받아주는 양상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인이 내놓는 물건을 30대가 비싼 값에 사주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지난 6월과 7월 시장에서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집값의 안정화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일부 지역의 경우 과도하게 주택가격이

올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들이 상당부분 정상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집값과 비교한 ‘정상화’ 질문에는 “시점에 대해 정확히 말씀 드리기 어렵고 일부 지역의 경우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월급날 앞둔’ 금호타이어, 압류 해제...금융거래 정상화

납품업체 대금·8월 급여 내일 정상 지급 예정



월급날을 이틀 앞둔 금호타이어 법인 운영비 계좌가 압류에서 풀리면서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

2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주요법 민사2부는 금호타이어 측이 제기한 ‘계좌 가압류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지난 24일 채권압류 강제집행 취소를 승인했다.

금호타이어 법인 계좌는 정규직과 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지난달 법원계좌를 압류한 이후 금융거래가 중지됐다. 도급사가 고용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임금차액과 이자 등이 포함된 채권 204억원을 지난 7월30일 전격 가압류했다.

이 같은 조치로 금호타이어는 올 여름 휴가비와 지난달 수당, 670여 개사에 달하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지급불능 사태’를 겪었다.

사태가 길어지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가 회사 운영비 계좌 정상화를 위해 강제 집행 정지에 이은 마지막 절차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진행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법원계좌 압류로 지급하지 못했던 여름 휴가비와 7월 수당 등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임금하고, 납품업체 대금과 오는 27일로 예정된 8월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마스크 생산량 주간 2억장 돌파...공적제도 시절의 4배

8월3주 2억512만개로 주간 최대 생산량 기록



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시민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지난 주 마스크 생산량이 ‘공적 마스크’로 공급되던 기간의 주간 최대 구매량보다 4배 이상 증가한 2억장을 돌파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주인 8월3주(17~23일)의 일회용 마스크의 총 생산량은 2억 512만개에 이르렀다. ‘공적 마스크’로 공급된 기간(3월6일~7월11일)의 주간 최대 구매량이었던 4315만개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 중 보건용 마스크는 1억434만개(50.9%),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8345만개(40.7%), 수술용(텐

탈) 마스크는 1733만개(8.4%)로 집계됐다.

특히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는 생산량 집계 이후 하루 최대 생산량을 갱신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 6월30일에 이어 이번에도 2000만개를 넘어섰다. 수술용 마스크는 8월 2주(1094만개)보다 639만개 더 생산돼 주간 1700만개 생산을 돌파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8월 2주(8325만개)보다 20만개 추가 생산됐다. 보건용도 8월 2주(8890만개)보다 1544만개 늘었다.

수입은 7월 1주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다소 하락세에 있으나 주간 1000만개 이상을 계속 유지했다.

마스크의 생산 역량 또한 코로나 19 발생 초기보다 높아졌다. 생산업체는 1월 말 137개사에서 현재 396개사로 2.9배, 마스크 품목은 1월 말 1012개에서 현재 2179개로 2.2배 증가했다.

가격은 온·오프라인 가격 모두 하락 안정세다. 보건용 마스크(KF 94)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1300원대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온라인 가격이 600원대로 진입했다. 보건용 마스크(KF 94)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1444원(13일)에서 1372원(21일)로 떨어졌다. 오프라인은 1717원(13일)에서 1721원(20일)로 유사한 수준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KF-A D)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736원에서 699원으로, 오프라인은 718원에서 709원으로 떨어졌다.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생산 역량 또한 높은 수준이라 코로나 19 초기와 같이 마스크 공급 부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만일 수급 불안이 가시화된다면 즉시 공적 개입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